

2006년 국가직 행정법 7급 문제

범위		출제분야	문항 수
총론			12
행정법 통칙	행정		
	행정법		
	행정법관계	공무수탁사인	1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사인의 공법행위	1
행정작용	행정입법	행정입법, 법규명령	2
	행정행위	허가, 행정행위의 효력	2
	그밖의 행정행위	행정계획	1
의무이행확보	행정강제	대집행	1
	행정벌		
	새로운의무이행확보..		
행정구제법	행정절차등	처분의 이유제시	1
	손해배상	국가배상	1
	손실보상		
	행정심판		
	행정소송	행정소송	2
각론			8
조직법	국가행정조직	행정기관	1
	지방자치	주민소송, 주민감사청구	1
	공무원	품위유지위위반	1
특별행정작용법	경찰행정	경찰권의 한계	1
	급부행정	공물, 공기업이용관계	2
	공용부담	환매권	1
	지역개발, 환경행정		
	경제행정		
	재무행정	조세	1

1. 공무수탁사인에 대한 설명중 옳지 않은것은?
- ① 공무수탁사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공행정사무를 처리한다.
- ②
- ③
- ④ 대법원은 소득세원천징수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며 그 징수의무자를 공무수탁사인으로 보았다.

정답 및 해설) ④ 판례는 소득세원천징수행위는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징수의무자를 공무수탁사인으로 보지 않았다.(대판1990. 3.23. 89누4789)

2.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 ① 행정청의 수리여부에 관계없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 ② 행정청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③ 이러한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지 아니한다.
- ④ 건축법상 신고사항에 관하여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으로 건축을 할 수 없고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치를 기다려야 한다

정답 및 해설) ④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신고는 행정절차법 제40조 2항상의 요건(형식적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지 않으며 신고에 의해서 곧바로 법령에 정한 법적효과가 발생하며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관련판례: 대판 2000. 9. 5 99두8800)

3.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이며 입법자가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판례이다.
- ②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 고시로 정할 수 있다.
- ③ 대법원은 국세청 훈령인 재산세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대해 소득세법시행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발생하여 법규성을 인정했다.
- ④ 집행명령은 상위명령으로 정하여진대로 내용실현을 위한 세칙규정만 규율할 수 있고, 법률 상위명령의 개별 수권 없이 발령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④ 집행명령은 새로운 입법사항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 기술적 사항에 관한 규율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임명령과는 달리 법률이나 상위명령의 명시적 수권이 없어도 발할 수 있다.

4.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 ① 헌법상 국회 전속적 입법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하고 세부사항일지라도 위임해서는 안된다.
- ② 현재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형벌의 종류 뿐 아니라 범죄 구성요건도 법규명령에 위임할 수 없다.
- ③ 현재는 법무사법시행규칙 관련 헌법소원에서 법규명령이 재판의 전제가 됨이 없이 직접개인의 기본권을 침해 받았을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 ④ 대법원은 제재적 재량처분의 기준을 정한 법규명령은 그 형식을 불문하고 법규성이 없는 단순한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지침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정답 및 해설) ③ 입법부(立法府)·행정부(行政府)·사법부(司法

府)에서 제정(制定)한 규칙(規則)이 별도의 집행행위(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直接)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하는 것일 때에는 모두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對象)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헌재 1990.10.15. 89헌마178) ③번 보기는 헌법과목에서 헌법재판소부분에 있어서 기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헌법이 필수과목인 7급에 있어서 답을 고르는데 그다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5.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접도구역 안에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청으로부터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
- ② 무허가행위는 제재의 대상이며 사법상 효과에는 영향이 없으나, 일부는 사법상 효과에까지 미칠 수 있다.
- ③ 소위 효과재량설에 의할 경우 영업허가는 재량행위로 보게 된다.
- ④ 숙박업구조변경허가를 받은 건물의 인근에서 여관을 경영하는 자의 법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쟁송으로 다툴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① 허가의 효과는 상대적인 것이어서 특정행위에 대한 법적제한을 해제해 줄 뿐, 그 금지이외의 법적 제한까지 해제하는것은 아니다. ①번 사례에 대한 판례는 “도로법상의 허가과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는 그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한 목적, 허가의 기준, 허가 후의 감독에 있어서 같지 아니하므로 도로법에 의한 이 사건의 허가가 있더라도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1. 4. 13 91도218)

6.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 ② 구성요건적 효력의 근거는 국가기관이 권한과 직무 또는 관할을 달리하는데 있다.
- ③ 판례는 국가배상사건에서 수소법원은 선결문제로서 행정행위의 위법여부를 심리할 수 없다고 본다.
- ④

정답 및 해설) ③ 국가배상사건과 선결문제에 있어서 수소법원이 그 위법성 여부대한 심사내지 판단을 할수 있는지에 관해서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누어져 있고 판례는 선결문제로서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심사를 할수 있다고 한다. (관련판례: 대판1972. 4. 28 72다337)

7.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행정계획의 주체는 계획법에 근거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바, 형성의 자유가 없는 계획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

- ② 계획재량과 행정재량을 질적으로 구분하는 견해도 있고, 질적 차이는 없고 양적 차이만 있다는 견해가 있다.
- ③ 계획재량 통제기준으로 형량명령이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형량명령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 ④ 대법원은 형량명령상 하자유형을 인정하면서도 통상 행정재량에서와 같은 재량권의 일탈·남용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형량명령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8.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이다.
- ② 토지나 건물의 인도의무는 전형적인 대집행의 대상이다.
- ③ 부작위의무에 위반하여 형성된 유형적 결과는 그 시정을 명함으로써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대집행의 실행행위 자체도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정답 및 해설) ②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불법광고판철거의무, 교통장애물제거의무와 같은 대체적 작위의무이다. 토지건물의 인도의무와 같은 비대체적 작위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9. 처분의 이유제시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의 능률을 중시하는 견해는 이유제시의 결여 또는 불비 등 흠이 있는 때 소송단계에서도 이러한 흠의 치유를 가능하다고 본다.
- ② 사실적 근거와 법적 근거 모두 제시해야 한다.
- ③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제시를 한 경우에는 당해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④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있어서도 행정청행위에 따라 근거와 이유제시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 ④ 계약직공무원에 관한 현행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를 징계하고 등에서와 같이 그 징계사유에 한하여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판 2002. 11. 26 2000두5948)

10. 다음 중 직무상 행위인 것은?

- ① 순경이 근무중 빈 집에 들어가 남의 물건을 훔쳐 나오는 행위
- ②
- ③
- ④ 인사공무원이 위조 공무원증을 만든 행위

정답 및 해설) ④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로서는 주관적으로 공무원집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한 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는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외관상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한바 있다 (관련판례: 대판 2005. 1. 14 2004다 26805)

11.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 ②
- ③
- ④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에는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④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예외적인 경우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련판례 1993. 3. 12 92누11039)

12.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취소소송의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원칙적으로 판결시라는

것이 판례이다.

- ③ 판례는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사실심 구두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 ④ 행정처분의 존부 및 원고적격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정답 및 해설) ② 취소소송의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은 학설은 처분시점과 판결시점으로 나뉘어지고 (처분시점이 통설), 판례는 처분시점의 입장에 있다.

13.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주체를 위해 의사를 결정,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행정관청이라 한다.
- ② 부·처·청은 행정사무분배단위로서의 행정기관의 개념에 입각한 것이다.
- ③ 정부조직법을 권한배분 단위로서의 행정기관의 개념을 채택한다.
- ④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합의제 행정관청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③ 정부조직법은 행정사무분배단위로서 행정기관의 개념에 입각하므로 틀리다. ②번 지문과 상반된 진술이므로 최소한 ②,③ 중에서 고를수 있는 요령은 있어야 겠다.

14. 지방자치(주민소송, 주민감사청구권)관련하여 틀린 것은?

- ① 주민소송은 감사청구권을 전제로 한다.
- ② 주민감사청구는 감독청에게, 주민소소의 피고는 당해 지자체장이다.
- ③ 감사청구는 1인으로 불가하지만, 1인에 의한 주민소송은 가능하다.
- ④ 지방자치법상 직접민주제도는 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이 있으며, 기타권리는 모두 대의제의 원리에 의한다.

정답 및 해설) ④ 지방자치법상 직접민주주의 제도는 감사청구와 주민소송외에도 주민청원, 주민투표, 조례제정, 개·폐청구권등이 있다. 그리고 직접민주제도로써 현행 지방자치법에 주민발안과 주민소환제도는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15.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사유 중 판례상 인정된 품위손상행위가 아닌 것은?

- ① 국립대학 교수가 논문발표를 함에 있어서 타인의 저술을 표절한 경우
- ② 공무원이 제3자에게 여관을 임대한 경우
- ③ 길에서 부침관계에 있는 여자와 싸우고 상해를 입힌 경우
- ④ 예비군 동원 훈련 중 2시간 30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하고

구멍가게에서 술을 마신 경우

정답 및 해설) 정답없음

① 대학교수가 재임용·승진을 위한 평가자료(연구업적물)로서 제출한 서적들이 다른 저자의 원서를 그대로 번역한 것인데도 마치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가장하여 출판한 것이 판명된 경우, 교원으로서의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대판 2002. 5. 28 2000두 9380)

② 지방공무원법 제56조 및 영리업무의 한계 및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건(1964.2.21 대통령령 제1641호) 제 2 조 1호에 의하면 공무원으로서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업무는 영리적인 업무를 공무원이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의미하고 원고가 위 내장여관을 소외 정성채에게 임대하여 원고 스스로 경영하고 있지 않음은 위에서 실시한 바와 같고 기록상 위 여관의 매수행위가 부동산 투기행위가 된다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 자체가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징계사유로 한 것은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위 법 제69조 1항 3호의 소정의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지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영리업무겸직 금지의무에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 제 1 항 제 1 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님은 기록상 명백하고 또한 원심의 판시는 위 여관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수행위와 관련하여 위 징계사유(2)의 범죄행위를 하였으니 양자를 합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풀이할 수도 있으니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다 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수개의 징계사유 중 그 일부인 위 (1)의 사유가 독립하여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징계처분 자체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 만으로도 원처분을 함에 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처분을 유지한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니, 원심이유에 소론과 같은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곧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징계사유 (1)을 영리행위 및 겸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이 아님은 앞서와 같으니 이를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며,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의 의무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로 된 사실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며,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가의 여부는 그 성질상 징계의 사유가 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행정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할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징계의 양정을

검토하여 보면 소론과 같이 설사 위 징계사유 (1)이 독립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징계사유 (2)의 사실만으로도 원고에 대하여 위 파면처분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징계종류의 선택에 있어서 재량의 한계를 심히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원고가 세무공무원으로서 유부녀와 부첩관계를 맺어 동거하다가 자식까지 출산한 그 여인과의 사이에 별거에 관한 합의도 없이 동거하던 집에 돌아가지 않고 별거를 시작하였으므로 그 여인은 자기와 그 소생아에 대한 생활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원고의 직장예까지 찾아와서 물의를 일으키게 되었고 그때마다 그 여인에게 폭행을 하였다면 이는 공무원이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 (대판1972. 10. 31 72누157)

④ 예비군동원 훈련에 응소하여 18키로미터의 점적이동행군도중 2시간 30분간 군우이탈한 비위를 범하여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고를 해임처분한 사실 및 원고는 지휘관의 허가없이 위와 같이 군우이탈하여 구멍가게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소정의 지휘관의 명령불복종죄로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확정하고(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는 군우이탈죄로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처분을 받고 항소중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이러한 비행에 대하여는 공직자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처사로서 이에 합당한 징계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지만, 위 사실만으로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의 하나인 해임처분을 하였음은 피고가 징계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 그 징계재량권을 비례의 원칙에 벗어나서 위법하게 행사된 것이라 하여 이건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대조하여 보아도 위 비위사실만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케 할 수 없을 정도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케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으로서도 능히 기강확립의 행정목적 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은 이른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심히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례는 보기의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품위손상행위로 인정했다. 보기④의 사례에서는 품위손상행위로 인정을 안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케 할 수 없을 정도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케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을 뿐 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으로 능히 기강확립의 행정목적 달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을 보면 품위손상행위 그 자체는 인정하였지만 해임처분이 비례원칙에 어긋난 처분임을 판단한 것이다. 해임보다 약한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처분을 했더라면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따라서 복원된 문제가 정확하다면 정답이 없음이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만일 문제가 품위유지위반과 관련하여 판례가 정당한 처분으로 본 것이 아닌 것은 이라고 출제되었다면 (각론의 공무원 부

본과 총론의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연결하여 물어보는 문제:출제자의 의도는 이것으로 보여진다) ④ 가 정답이 되겠지만 (판례는 비례원칙에 어긋난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하였으므로) 복원이 정확하다면 정답이 없음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출제오류로 보여지는 문제이다.

16. 경찰권의 한계로 옳지 않은 것은 ?

- ①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용자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한 대위책임이 아니라 사용자 자신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 ② 사생활 불가침의 원칙상 미성년자의 음주·흡연에 대한 경찰권을 발동할 수 없다.
- ③ 자신이 관리하는 창고에서 화재가 난 경우 고의나 과실과 무관하게 그리고 타인에 의해 화재가 야기된 경우 관리자는 책임을 진다.
- ④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에 의해 경찰관은 국립대학 교수 연구실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② 경찰공공의 원칙중 사생활 불가침의 원칙으로 사생활에 관여할수 없으나 사생활이라 하더라도 동시에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예외이다.(미성년자의 음주,흡연, 전염병발생등)

17. 공물의 특허사용 틀린 것은?

- ① 자유사용은 자유롭게 사용하는 관계임에 반하여 특별사용의 일종인 특허사용은 공물의 원래의 목적을 넘어 사용하는 관계이다.
- ② 허가사용은 경찰상 위험방지가 허가여부의 기준이 되고 사용기간이 비교적 단기인데 반하여 특허사용은 적극적 복리목적 실현이 기준이 되며 사용기간이 비교적 장기이다.
- ③ 하천부지 전용허가, 도로 전신주설치는 특허사용이다.
- ④ 수산업법상 입어권은 특허사용이다.

정답 및 해설) ④ 입어권은 민중관습법상 사용이다. 주의할점은 어업권은 입어권과 달리 형성적 행정행위의 일종인 특허에 해당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18. 공기업이용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기업이용관계의 성질에 관하여 사법관계설, 공법관계설 등이 있으나, 공기업의 법적 행태에 따라 다르므로 그 구별실익이 없다.
- ② 전화가입계약은 전화가입희망자의 가입청약과 이에 대한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영조물이용의 계약관계이지만 그 성질은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불과하다.

③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물의 공급을 받는 자에 대하여 수도료의 부과징수 및 납부관계는 공법관계이다.

④ 공기업이용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관계이다.

정답) ① 공기업을 사법관계로 보느냐 공법관계로 보느냐에 따라서 적용법리의 결정, 소송절차, 행정강제적용여부등 구별실익이 있다.

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환매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환매권자는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개시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이다.
- ② 환매의 목적물은 토지소유권에 한정되며 그 이외의 권리 및 물건을 환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③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환매권의 행사방법은 환매권자의 환매요구와 행정청의 동의로 이뤄지며 이 때 환매금액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④ 환매는 환매기간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가 수령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되는 것이다. (참고판례 1993. 8. 24 93다22241)

20.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
- ② 조세부과권은 재력취득을 위한 권력행위이다.
- ③ 조세부과는 일반 국민으로부터 재력에 따라 균등 부과하는 것이다.
- ④ 조세부과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조세는 대한민국 영토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는것이 아니라 법률상 요건을 갖춘 모든 사람에게 부과된다.

올해 행정법을 치른 수험생들의 평가는 대체로 무난하다는 견해와 다른과목에 비해 고전을 했다는 입장으로 나뉘어지는데 이같은 상반된 견해는 올해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아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판례가 잘정리된 수험생에게는 쉽게 문제를 접근할수 있었다. 반면에 이론에만 치중한 수험생에게는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을 느꼈을것으로 추측되어진다. 이제 행정법 과목도 헌법과 마찬가지로 판례의 입장을 물어보는 지문이 점차 증가되고 있음을 알수 있는데 이는 객관식 출제에 있어서 다양한 견해를 보이는 학설과 달리 판례의 출제는 정답의 논란이 없을뿐 아니라 추상적인 이론에 대한 적절한 판례공부의 병행이라말고 법이론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방대한 판례를 모두 다 섭렵할수 없을뿐더러 시험에 출제되어지는 판례는 유명교수의 행정법교과서(김남진, 김동희, 석종현, 홍정선, 한 건우교수님의 교수님의 교과서)에서 소개되는 판례정도면 충분하다고 할수 있겠다. 7급 행정법 경우 2000년부터 올해까지 출제경향을 보면 총론이 12-13문제, 각론이 7-8문제 비중으로 출제되고 있고, 총론에서는 행정작용법과 행정구제법에서 8-9문제가 출제되고 각론은 골고루 단위별로 1문제씩 출제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점을 참고하여 수험을 대비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올해 출제된 문제는 복원이 정확하다는 전제에서 본다면 한문제의 출제오류가 보여진다. 출제가 공개되지 않음이 심히 유감스러울 따름이다. 끝으로 복원에 도움을 준 지인, 각종 수험사이트에 감사를 드리며 준석, 경엽의 수험생활에 합격의 결실을 맺기를 기원해 본다.

-적석산이 보이는 통나무 연구실에서-